

FOCUS 만5세 조기입학 추진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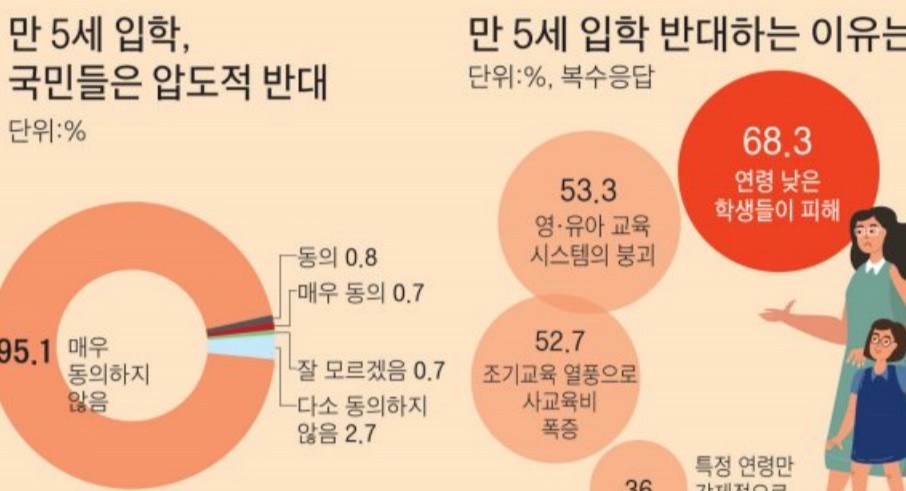
말도 잘 못하는데 학교 가라고 '코로나 베이비' 부모 분통

서울 광진구에서 2019년 2월생(4세) 아이를 키우는 이모(34)씨는 지난해 유독 말이 느린 아이의 발달상태가 걱정돼 병원을 찾았다. 어린이집에서 다른 엄마들이 "왜 뛰어나는 아이가 아직 말을 못하느냐"고 자주 물어 언어 지연 검사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언어치료의 길은 험난했다. 지난해 6월 인근 대학병원에 방문해 검사를 신청했지만, 대기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2개월 후인 지난해 8월에야 겨우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이씨는 "진단 후에도 치료를 받기까지의 대기만 7개월이라 올해 1월에야 언어치료사와 처음 만날 수 있었다"며 "코로나 19로 인해 언어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다는 건 주위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입학연령 이렇게 당겨진다

입학시기	입학대상자	초등학교 1학년 나이
2025년3월	2018년 1~12월생 2019년 1~3월생	만6세+ 만5세 혼재
2026년3월	2019년 4~12월생 2020년 1~6월생	
2027년3월	2020년 7~12월생 2021년 1~9월생	만5세
2028년3월	2021년 10~12월생 2022년 1~12월생	
2029년 3월	2023년 1~12월생	만 5세 입학 본격화



작년 언어장애 2017년 대비 30% 늘어

경기도 수원에서 4살 딸을 키우는 엄모(38)씨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2월 인근 대학병원 재활학과에서 언어 지연 진단검사를 받으려 했으나 검사 대기만 1년이라는 말에 결국 진단검사를 포기했다. 엄씨는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만 진료비도 경감되고, 정확한 치료도 가능한데 1년을 기다리려면 아이에게 너무 긴 시간"이라며 "두 살 터울의 오빠와 동일하게 키웠음에도 마스크 때문에 언어를 익히는 속도가 너무 느려 걱정이 크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3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취학을 위한 범국민연대 집회에 참여한 학부모들이 개편안 철회 촉구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서울 내 언어치료센터 3곳에 직접 문의한 결과 언어 지연 등 말하기·언어장애를 진단받은 후 즉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곳은 하나에 불과했다. 나머지 2개 기관은 모두 현재 치료 중인 아동들이 치료를 중단할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5세 미만 말하기·언어장애 환자 수는 2017년 7075명에서 지난해 9219명으로 30% 정도 늘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상담센터의 직원은 "과거에는 자폐스펙트럼장애나 정서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방문이 잦았는데, 최근에는 언어치료가 독보적으로 많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 기존에는 정상 발달과정을 밟았을 아이들도 말이 느려 센터를 찾곤 한다"고 전했다.

2019년 이후 출생아 코로나 직격탄

마스크 탓 입 모양 보고 학습 못 해 말 느리고 언어 장애 등 발달 지연

교직원·학부모 98% 조기입학 반대

학부모 "무조건 입학 유예하겠다"

전문가 "학교 부적응 아이 늘어날 것"

코로나 베이비 세대의 발달 지체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서울·경기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학부모 145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의 71.6%, 학부모의 68.1%가 '코로나19가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줬다'고 답변했다. 바깥 놀이가 위축돼 신체 발달이 지연되고(77.0%), 마스크 사용으로 인해 언어 발달이 지연됐으며(74.9%), 과도한 실내 생활로 인한 정서적 문제(63.7%) 및 사회성 발

달 문제(55.5%)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서울에 위치한 공립유치원의 교사 이모(29)씨는 "영유아는 놀이를 통해 언어를 익히고, 사회성을 습득하게 되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이런 기회 자체가 차단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가르치던 아이들과도 확연히 달라 교사들 사이에서도 대응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타격도 적지 않다. 초등

학교 1학년 담임교사인 주모(32)씨도 "지난 2년간 입학한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배워야 할 생활습관을 제대로 갖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교육현장에서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조기입학 정책을 펼치면 코로나 베이비 세대가 겪을 간극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도입 초기 조기입학을 해야 하는 2019년 1~3월생, 2020년 1월~6월생 등 '통합시기'에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은 더욱 분통이 터진다.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관련 유치원 학부모 간담회 현장에서 장상윤(맨 왼쪽) 교육부 차관이 항의 중인 학부모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2월 아이를 출산한 최이레(35)씨는 연말에 아이를 낳으면 포레에서 어울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변의 권유에 시기에 맞춰 계획 임신, 출산했다. 최씨는 "어린이집의 4세 반 아이들 사이에서도 인지발달이 월등한 수준이고, 연말에 태어난 아이들과의 차이가 커 비슷한 개월 수가 많은 어린이집으로 옮겨야 할지 고민까지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최씨의 아이는 함께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2018년 1월생과 약 13개월의 월차이가 벌어진다. 최씨는 "아이들은 하루하루가 다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정책을 바꾸면 피해를 볼 아이들의 손해는 누가 보완해주느냐"라며 "지능발달 차이는 물론 신체적 발달 차이도 크기 때문에 만약 정책을 강행한다면 무조건 입학 유예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반대 의견이 절대적으로 많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지난 1~3일 교직원·학생·학부모 13만1070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연령 하향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7.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학생 발달단계에 맞지 않아 연령이 낮은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며(68.3%), 영·유아 교육시스템의 축소·붕괴할 수 있고(53.3%), 조기교육 열풍으로 사교육비가 폭증할 수 있다(52.7%)는 점을 꼽았다.

'빠른 입학' 폐지 후 입학 유예 더 많아

전문가들은 만 5세 입학 정책에 대해 아이들의 발달단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권정은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한국4년제 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회장)는 "만 5세 수준의 아이들은 신체적 발달에서부터 월령에 따른 차이가 크다"라며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도 이 차이가 이어지는데, 이런 발달과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정책을 편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만 5세를 조기 취학시키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육을 강화하겠다며 5세 취학 정책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을 시점 학교는 문을 닫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끝까지 긴급보육을 진행했다"며 "보육에서는 학교보다 아동 보육기관이 더 적절하다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2009학년도부터 1~2월생의 '빠른 입학' 제도가 폐지된 이후 조기입학보다 입학유예가 더 많은 경우도 만 5세 입학에 부정적인 요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연간 초등학교 조기 입학자 추이는 2009년 9707명으로 고점을 찍은 뒤 지난해에는 537명까지 줄었다. 오히려 입학유예 아동 수가 757명으로 더 많다. 조형숙 중앙대 유아교육과 교수(한국영유아교육학회 회장)는 "현재도 만 5세 조기입학이 가능하지만, 조기입학을 할 경우 학교 부적응이나 스트레스 등의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것은 이미 연구결과로 증명된 사실"이라며 "만 5세에는 정서발달과 사회적응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만 5세 입학을 강행해도 실제 법 개정까지는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기 위해선 초·중등 교육법상 만 6세로 규정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다수가 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이미 절대다수의 국민이 만 5세 입학 추진 정책을 반대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대선 공약이나 국정과제에도 없었던 이 정책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유진 기자 oh.yoojin@joongang.co.kr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40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Since 1982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